

90-50

사료번호	12
제 호	50

관리번호	78
	E-61

78 3 4

70년대 미국여론의 전망과 대비책

보관용 (관리과) 5/4

512612

국토통일원

1970. 9.

국토통일원

70년대 미국여론의 전망과 대비책



국토통일연구원

함 병 춘

I . 계 언

여론이라는 말은 매우 애매한 말이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층의 실질적인 정도나 깊이는 언제나 알기 어렵다。

그런데 여론에 대한 학자의 정의는 일정하지 않다。 가령 W . Albright 은 여론이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심을 기울이는 집단구성원 전부의 의견 표현이라고 하면서 다수인의 의견과 다수인의 의견의 표현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L . W . Doob 는 여론이란 동일한 사회집단에 속하는 인간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N . J . Powell 은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인간의 집단이 가지는 판단 태도 및 신념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우리나라대로 여론 (이하 여론이라고 약자를 사용함) 을 정의해 보면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하여 가지는 공통적인 의견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과제로서 그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발생되고 또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통된 과제로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하여 정도의 차가 있을 지라도 사상이나 입장을 달리 하는 대립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여론의 기원은 토론 (대파)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이 성장하여 여론으로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또한 자주적인 입장에서 발언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발언이 권력이나 기타의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의곡되거나 금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 또는 공익 (Public Interest) 에 대하여 동질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공익의 관념이 어느 정도까지 광범하게 존재하게 되고 또한 표현의 자유가 종전의 어느 사회의 그것보다도 크게 보장되고 그 위에 효과적인 전달수단을 가지게 된 것은 근대사회에서의 일이다.

거기에서는 여론 (Public Opinion) 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또한 존중되었다. 근대적인 여론은 서구에서 발전한 개인 주도적인 시민사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공익관념을 기초로 하는 공중 (Public) 또는 시민이 형성하였던 Public Democracy 를 모체로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20세기의 여론 19세기의 그것과 같이 Salon의 담론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성적인 공중의 사고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Mammoth와도 같은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선전에 의하여 수지적인 입장에 서고 있는 그러한 대중을 주체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매스·미디어」가 생각하고 「매스·미디어」가 대론하고 「매스·미디어」가 판단하는 것이 20세기 여론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여론의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근대적 여론은 시민을 주체로 하였음에 대하여 20세기의 현대여론은 시민 아닌 대중(「매스·미디어」에 의하여 그 의견이 좌우 당하는)을 주체로 하며 19세기의 시민은 동질적인 것이었고 공통된 이해관계와 동일한 이해올르기를 가지는 것이었음에 반하여 20세기의 대중은 오히려 누질적인 계급에 의하여 형성되며 따라서 공통된 이해관계보다는 계급적인 이해관계와 대립적인 이해올르기를 내포한다. 이와같이 주체가 변질됨으로써 여론은 필연적으로 변질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여론의 질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은 오히려 자명한 일이다.

II . 여론의 형성 과정

현대에 있어 여론형성에 가장 중요한 중구적 의견집단 (Opinion Group)은 정당, 각종의 개화적 정치집단, 경제단체, 신문, 관계 등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론형성의 최초의 집단은 교회이었으나 근대이후에 있어 여론의 대변자가 된 것은 정당이고 다음에 각종의 정치집단으로서 이들은 여론형성을 시도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중요한 정치문제가 대부분 통제적 문제에 관련된 결과 노동조합 상공회의소를 위시한 각종의 경제단체 또는 직능단체가 여론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술, 예술 분야의 분화단체를 위시하여 다양 각색의 사회 집단도 시시로 야기되는 공공계쟁문제에 관한 공통적 의견을 정리하여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것을 본다.

또한 신문을 위시한 언론계의 주요직분이 여론형성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신문의 논조에는 그 자신의 기업적 이익에 의한 의견과 관심이 학자, 평론가, 논설위원, 기자, 법조인, 정치가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작용한다. 신문이외에도 각종 간행물, 성명, 집회, 연설, 분서, 라디오, 영화, T.V, 등 「Mass - Com」이 이용되고 있다. 관계의 여론은 의회, 관료, 군인 등의 집단적 여론으로서 비공의 여론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사회여론과 대립적인 것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여론형성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독재정치의 선전은 주로 전기한 관계의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일조 성립된 여론은 정책속에 구체화되고 혹은 제도로서 고정화되어 인간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습관이 영속화하고 개인의 행동이나 욕구를 제약하기에 이룬다면 바로 그것에 반항하는 새로운 의견집단이 대두하여 새로운 분계점을 제시하여 새로운 의견의 집합체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로서 여론은 습관과의 사이에 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여론이 정치적 공동체에 있어서의 계쟁점을 둘러싼 태도로서 생성 소멸되는 경우에 공동사회내의 각개인이 각기 고유한 생활범위를 가진 이상 제일 정확히 측정한다면 그 인격의 수만큼의 태도의 수가 있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사한 계쟁점은 약간의 계쟁점에 약간의 형태로 심점화되고 심층되고 정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견집단이다. 왜 이러한 과정이 실행되느냐 하면 계쟁점은 해결을 요구하고 해결은 권력에게 기대하여야 하고 권력은 집중되고 있는데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개개인의 다양적 태도는 그 의식의 유무에 불분하고 몇개로 정리되어 태도의 상징속에 융합되어 가는 이른바 단순화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단순화의 정도는 그 계쟁점의 성격과 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의 형성에 따라 상이한 것이며 여기서 여론의 분포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또 개인은 여론 형성의 사업이나 사수에 공히 지배적 여론에 위선 의식적으로 합치하고자 하는 동조성향을 가지므로 그 진의 속 내적 여론은 그 표현 속 외적 여론과 승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서 여론의 실질상의 분포는 일층 확대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의식적 작위에 의한 일종의 허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개인의 태도결정 자체가 제도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고정화되고 관습화되어 인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의식화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습관이 영속화 고정화되어 사회상황에 의하여 조건지워진 개인의 행동이나 욕구가 일반적 성격을 띠우게 되나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계쟁점이 발생하자 위선은 단순화의 원칙에 의하여 심중되지만 조만간 거기서 반발이 조성되고 새로운 대결의견에 의하여 동조성의 경향에 의하여 확산한다는 순환현상을 야기한다.

이런데 여론은 외적 여론으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도 그 근저에는 내적 여론을 내장하고 다시 양자는 각종 각양의 복합에 의하여 결합되는 것이므로 여론의 분포에 관하여 그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고 그 동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격의 전 태도를 포괄적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현대대중사회에 있어 여론형성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O. W. Mills는 여론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근대의 이른바 「공중사회」(Public society)에서는 소위 공중(Public)들이 상호토론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공중사회가 대다수의 성원이 여론형성에 수동적 타율적 역할을 연출하는데 불과한 현대의 「대중사회」(Mass society)에로 변질하자 권력자층의 권력집중을 가져오고 동시에 진정한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기가 곤란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현대의 미국사회가 그 변질과정에서 공중사회로부터 상당한 거리의 지점까지 대중화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 「나치스」 독일이나 「쏘비에트」 「러시아」의 전체주의사회 단층은 대중화되기 전에 이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ills」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미국의 경우 뿐만 아니라 대중사회화의 일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의 대부분에 있어 이 경향은 일찍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편 도시화(Urbanization)의 현상은 현대사회의 대세이다. 이로서 현대의 사회는 이른바 대중사회(Mass society)로서 일반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무릇 대중사회라 하면 단순히 다수의 인구를 가진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전통적인 문화나 상범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점에서는 자유이며 그러나 그들 상호간을 통합하는 강력한 심리적 지대-공동의 목적 이상, 신념, 동료의식, 일체감 등을 결여하고 있는 점에서는 독립적이며 그리고 전인격적인 접촉이 적고 그 자신의 인격에서 보다

도 오히려 노동자, 학생, 봉급자, 회사원, 점포고용자 등의 일원의 유개념으로부터 행동하고 접촉하고 평가된다는 의미에서는 비인격적 또는 익명적인 이러한 다수의 개개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화와 대중화의 추세는 기본적 사회체제여하를 불문하고 또 동서양을 불문하고 점점 전져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중사회에는 대중여론과 문화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는 것은 이른바 「Mass Media」이며 이러한 매개물을 통하여 형성되는 대중여론과 문화는 일방에 있어 전통적 민속문화를 파괴하고 타방에 있어 인류의 향상을 지향하며 창조되는 고급문화의 존립을 위협한다. 또 그것은 인류에게 대용경험을 부여한다. 즉 그들 자신의 주체적인 체험이 아니고 어떤 타인이 경험한 기성품의 경험을 부여하고 이로서 이미 비인간화되고 원자화된 개개인을 다시 비인간화하고 수량화한다. 여기서 이른바 「대중적 인간」(Mass Man)이란 인간상이 만들어지고 「리이스만」의 이른바 개인지향형의 (Other Oriented) 인간성격이 형성된다。

특히 시끄러운 도심지에서 피상적인 교양을 지니고 기계화되고 관료주의화된 조직속에서 일정한 기술적 업무에 종사하는 봉급자, 지식인 등을 그들의 자존심과 생활에 대한 감격을 잃고 불만과 만성화된 초조 불안속에 생활하게 된다。

여기서 「Erich Fromm」의 이른바 「자유로 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 또는 「자유 공포」이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들 대중이 귀속하고 안주하고 봉사할 전체자-가령 민족공동체-를 갈망하게 되며 대소 선동의 침략에 대하여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이나 독일에서의 「나치스」정권의 출현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중화에 따르는 각종의 실행이나 재해를 그것이 산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대되었기 때문이었다。

J. Bryce는 여론 또는 민의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민의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한편에서는 권력의 성립적 요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의 존속적 요인으로서 존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의 발전단계를 네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민의가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생각하여 그의 권력에 복종하는 단계이다。

둘째의 단계는 지배계급내에 충돌이 생기고 그러한 투쟁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종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적 또는 진보적 정신을 가진 민중이 지원하는 경우인데 이 단계에서 투쟁을 결정하는 것은 무력이다。

셋째의 단계는 과거에 있어서의 지배자가 오히려 복종자가 되고 분쟁의 해결은 주권자인 다수인에게 맡겨진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다수자의 의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선거에서의 투표지에 의하여 표명되고 그러한 의사가 민중의 위주를 받은 내각 또는 입법부에 의하여 실현되는 단계이다。

네째의 단계는 시민 대다수의 의사가 언제라도 확인될 수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민의의 확인이라 하여도 거기에는 큰 제한이 첨가된다。

즉 단순한 확인이 아니다。 어떠한 대표기관의 손도 거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어떠한 투표기관의 손도 거칠 필요가 없이 있는 그 대표의 민의가 언제나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권에 의한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된 상태 또는 방편에 의하여 순수한 민의가 확인될 수 있는 단계가 곧 네째의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여론의 움직임이 다른 어떤 단계에서 보아도 완전하게 나타나며 권력은 언제나 다수 시민의 수중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야 말로 “여론에 의한 지배”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 미국의 제분제점과 여론

1 . 70년대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은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월남은 미국인에게 하나의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유럽에서 공산주의와의 가교는 소련의 체코침공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국제적 긴장은 중동에서도 야기되고 있으며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나 라오스분제 등 세계의 긴장완과는 쉽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핵력을 주축으로 한 군비경쟁은 계속적으로 미국이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어떠한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국제분제를 직접적으로 Control할 수 없으며 「힘」이란 수단으로도 자주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없을 때가 많으며 이런 힘의 국가가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세계이다.

따라서 미국의 70년대 새로운 자세는 「능동적인 자세」라는 말로 특징지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분제를 Control하려는 미국의 욕망은 포기되어야만 하며 미국은 직접적으로 Control하는 대신에 국제분제에 영향을 주도록 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은 두개의 관념에 근거하여 그들의 외교정책을 설정하여 왔었다.

하나는 공산주의를 봉쇄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사명은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 모든 세계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제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좋지 않고 위험스럽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군사적 수단이나 경제원조,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빈번한 국제분제의 개입에 의한 힘의 배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봉쇄정책은 미국에서 확고한 방향 감각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사명감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NATO와 서구라파의 재건이라는 가장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위대한 그 성공 자체가 국제정치질서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케 하였던 것이다. 같은 서방진영의 동맹국내에서의 위협스럽고 강력한 국가들의 출현, 중소분류, 쿠바에서의 공산주의의 발생, 실패 그리고 북괴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구식사고방식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 되어 버렸다.

미국에 의해 침배되는 세계는 미국을 위해 바람직한 것일 수 있지만 미국의 우방에게나 적대국에게나 그러한 세계는 받아 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 공동적으로 통치되는 세계가 있다면 세계의 4분의 1 정도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소련 사람들 자신은 초강대국이 각자의 명확한 영향권을 갖고 세계분제의 정책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명백히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수봉할 수 있는 미소공동지배영역을 만드는 일은

가장 어려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일의 분할문제와 같은 경우 미국은 그들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주요 문제의 해결책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을 자기와의 결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자유중국이나 일본, 서독을 억누를 수 있고 동정을 계속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타의 다른 국가들은 마소의 지배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체제에 저항할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체제의 존립 여부는 공동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소의 강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의 대가가 너무나 값비싸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국제 문제는 단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국의 동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국가이익은 더욱 복잡적이고 균형있는 세계질서체제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겠다. 소련이나 중공에 적대하는 문제들 포함하여 현존하는 수많은 분쟁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세계질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이루어 질 수 없는 하모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과 폭력의 전제에 있는 것이다.

그 질서는 힘의 다양한 분배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와 방법론의 다양성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국제질서체제는 미국이 지나친 개입과 미국본토에로의 후퇴간의 적절한 수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질서있는 체제내에서는 초강대국들은 세계평화의 최후의 보충안으로서 남아 있을 것이며 미국은 중대한 전쟁을 제지하는 과업은 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다음과 같은 행동시침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과업은 강제나 매수나 또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전복과 같은 수단으로서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의사를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익때문에 그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키도록 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이 상호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행위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일에 이익이케이티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국가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협력의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이 한정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며 미국의 행위가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를 미국에게 묻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행위가 절제라는 목적을 갖는 국제정치체제에 공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국에 묻는 것이다.

미국은 빈번히 그렇게 하는데 실패해 왔다. 미국이 「힘의 오만」을 뽐낸다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위할 것을 고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1967년의 중동전쟁과 소련의 체코 침공이 「상토·토밍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월남전을 뒤따라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지 우연한 일지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이니시에이티브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부과하였던 것보다 더 크며 더 많은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2급강대국들을 고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군사력이나 첩보활동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수록 외교활동과 다변적인 국제기구에 보다 많은 기대를 걸 것이다.

둘째는 다른 국가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은 불안정한 피보호정권과 관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을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에 밀지시키고 견속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정분제 이외에서는 소련은 이러한 문제를 잘 이해해온 것 같다. 소련은 중동에서 아랍민족주위의 강력하고도 주체적인 세력의 불평을 이농하므로서 그들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당장에는 민족주위세력에 의해 기존하는 미국의 이익이 도전받는 한이 있어라도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세력과 결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미국이 민족주의 세력과 공감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미국과 여타 국가-선

신국이든 후진국이든 — 둘 간의 참나운 비극의 밑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모든 국가의 국내분쟁을 모다 생각하며 배합을 잘 알아야 하며 임시변통의 시행책모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문제를 극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국외 국내분쟁을 무시하고 비극 개입하는 그런 방법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 식의 개입은 자국이나 서약한 동맹국과의 관계할 위파시키고 그는 국가의 성공적인 사회에 될 것이다.

이렇게서 설명된 행동시행은 세교부 비모성력의 중요한 세가지 주요한 단점하는데 마땅히 노골적 이 있다. 이 세가지 주요한 단점과 이다. 국가는 간접 개입은 개개성시의 어떤 시기의 세력균형의 안정. 높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세교부행동을 자국 내입원화. 세계 미국과 보편의 국제적대적 사회 공중과농성의 적갈이 노골적이다.

미국이 영광스럽게 전남순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중이 걱정 부세아리노 길지만 사나의 중요인 Power부 인식될 수 있는 사실적은 것치의 전설이 아닌 아세아제국의 중요관심사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적으로 한 매제는 홍콩과 인도나 일본과 같은 국가를 간접 마형적인 균형관계일 것이다. 이 새로운 실지는 미국이 홍콩을 승인자의 UN에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요파제 개인 모든 환상을 버리고 미국의 무역금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핵전쟁의 위해 지배되는 세계에서는 굳이 있는 권력의 체계를 반
 전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도 명백하다. 굳이 있는 세계질서를 위
 해서는 초강대국 선택인의 감독이 가장 필수적이다. 전쟁을 혁
 제할 수 있는 협상이 중부유럽이나 소련 동중에서 각 진감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초강대국의 세력지
 그와는 다른 유용성 반발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렇다 하여라도 국가간에 내전보려인 군사비의 사상이 지
 나친 모순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세력지는 존재할
 것이다. 어리석은 핵전의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민정에서
 커리원 의원직 남기는 책이도 결사항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 시공된 나와 마진까지도 미국의 1970년대 외교정책은 세
 계의 체제적인 에겐상안에 있어서 적실적인 개입의 성태보다는
 나중적인 불의 내의 감감행사의 방남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내외 여론이나 언론, 방송, TV, ... 「Mass Media」의 수치는
 적의 마진까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종의 관심은 미국정부의 권
 령에 하거나 귀하고 있는 세계속에서의 행동으로 더 소극적인
 는 자다. 완전하던 세계속의 막막에 대한 침략적으로도 국내부제
 의 새질에 부전관심을 기공하여 한다는 대두이다.

즉 부전국민 및 나라를 끝까지 할이의 통제 내의 일상적 행위를
 위해 지반해야 하는 대과가 너무 값비싸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소재의 부담은 가중사회적까지 설난한 미뚫된 어
 리 국가의 전쟁에 개입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병역분제와 직결되므로 생존의 분제를 무릅쓰고서라도 후진제국의 공산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분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의 여론추세를 보면 대기업가의 세력 내지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기업가들의 일관적인 견해 특히 순수산업계의 기업가들은 전쟁을 하나의 기업의 Survival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특히 강조하여 전쟁의 종결은 경제계의 파탄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의 기업가들이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군부세력도 마찬가지이다. 군부의 고위간부는 전쟁이 없이는 승진이나 명예를 획득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군사면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고위장성을 비롯한 간부들은 전쟁을 은연중에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최근의 월남전 등에서 군부의 입장이 항상 강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는 찾아 볼 수 있다.

기업가나 군부의 영향력이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일반 미국시민)의 여론 추세는 외국에서의 군대 철수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자유무역의 제한조치등 최근에

흔히 논의되는 신고립주위의 방향으로 70년대에는 진전되지 않을
가 생각된다.

2. Student Power와 여론

근래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은 막론하고 학생운동에 많은 관심을
을 갖고 있는데 이는 종래까지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학생층이 근래에 자기 자신들이 대
단히 강력한 사회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생집단이 사회에 대해서 극히 비례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모든 학생운동분제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대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발언권을 정치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
거나 학 문제에 반영하려고 한다거나 그 형태와 표현은 그때그
때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면 왜 근래에 와서 학생들이 강력한 사회집단으로서의 발언권
이 중요하게 되었고 자기의 지위를 그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로서는
근래에 와서 학생수는 급증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보장은 대단히
막연하고 불안하게 된 데 기인한다.

따라서 학생집단의 성격이 달라졌으며 학생들은 년령상으로 성년이
며 평균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행
사해야 되며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발언권과 영향력

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태세에 들어간 것 같다。

이상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은 학생 자치의 분계에서 부터 학교재단의 분계 즉 학교운영에 참고해야 한다는 생각뿐 아니라 전사회적인 분계에 관련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쟁분계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부터 후술할 흑인분계, Sex분계 등 다양하다。

Student Power를 행사하는 학생집단에 특별히 나타나는 이데올로기는 없으나 한마디로 무정부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데올로기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부르짖음과 행동에는 체계화된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외교문제에 대한 학생집단의 태도는 월남전과 같은 전쟁에서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막대한 예산이나 인원의 투입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귀결된다。 더구나 학생들은 군사력의 유지를 위해 보충되는 병력의 자원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찬성하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전쟁터를 원할 것이냐는 의문이다。 물론 병역에 봉사하는 것을 피하려 해서가 아니라 외국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기꺼이 여길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학생집단은 당연히 동남아에서와 같은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물론 기타 여러 서방진영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점진적인 철수를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번의 기동 훈련 등에서 단시간내에 많은 병력이동이 가능하다는 실험을 거친 후에는 머구나 타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 내지 감소시켜도 커다란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뒷받침 해주게 되었다.

1970 년대에 이루어질 과학, 기술의 발달은 군사력의 기동성을 증대시킬 것이고 따라서 군대의 철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젊은 세대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 정책결정의 여러 측면에서 학생의 움직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70 년대의 정책에까지 영향력이 미치리라고 예기되는 젊은 지식층인 학생집단이 미국의 종결세대가 등장할 때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흑백분제와 여론

미국의 흑인분제가 미국의 치부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속한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인권이 가장 존중되는 나라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치부는 더욱 크게 보인다. 뿐만이 아니라 이 치부때문에 미국은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받고 정도이상의 비난을 받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또 미국의 정당한 행동도 선의도 또는 세계강국으로서의 영도력도 이 치부때문에 해매모호하게 되고 말살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흑인분제는 미국을 위해서만 슬픈일이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영양을 생각할 때에는 세계를 위해서도 슬픈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흑백분류의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대체 미국은 진정 합치국가냐 하는 의심을 가질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실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민권법이 제정되고 인종차별법에 대하여는 연방대 법원이 위헌선언을 내리고 이런 연방법이 주에 의하여 무시될 때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연방군대까지 동원하지만 이런일은 모두 최근의 일이다. 오랫동안 흑인에 관한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법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게 될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거의 근절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흑인에 대한 린치사건이 백인들에 의하여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가 그러나 다행히 린치를 면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는 기회가 흑인에게 주어졌다 하여라도 그 재판이 불공평했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흑인들은 백인들 법관앞에서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증거의 유무를 막론하고 동일한 혐의사실에서 백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경우라도 가혹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흑인분제의 양상은 차차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굴욕적인 차별을 받아왔던 흑인들도 서서히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흑인운동의 지도적 기관이며 「킹」목사가 뒤에 의장으로 취임한 미국흑인향상협회(NAAOP)가 발족한 것도 1905

년이었다. 그러나 흑인의 각성도 무엇보다도 흑인들 자체의 생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1차, 2차의 세계대전과 그 중간에 있는 1930년대초의 대공황이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두번의 세계대전에서 흑인도 백인의 전우가 되어 조국인 미국을 위하여 싸웠다는 것은 흑인에게 하나의 커다란 긍지를 주었을 뿐 아니라 백인들중에서도 동포로서의 흑인을 실감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은 전쟁이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미국의 북부가 바로 공업지대라는 데에서 이 때까지 남부의 농장에 고립되고 낙후된 농촌생활을 해오던 많은 흑인들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없는 북부로 대거 진출하여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새로히 도시생활을 하게된 흑인들은 저임금이기는 하나 남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좋은 보수를 받게 되어 경제상태도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야도 넓어졌다.

한편 대공황은 남부의 농업에 더욱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남부로 부터 기타 지역으로의 흑인의 이주를 더욱 촉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공황은 흑백의 차별없이 습대한 것이었으므로 이른바 뉴딜정책하에서 연방정부가 실시한 구제 및 그 밖의 사회정책에서도 흑백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었다.

이리하여 흑인분제는 비단 남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분제로 확대됐을 뿐 아니라 또 흑인분제의 본질도 남부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의 폐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분계, 노동분계가 결들여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흑인생활의 근본적 변화로 말미암아 흑인들의 심중에는 미국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복합체의 평등한 인간으로서 이에 상부하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논이 서서히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흑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도 또 미국을 위하여도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흑인의 처우는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인종차별이 심한 곳일수록 강하게 느껴지고 1950 년이후에는 남부에서도 차츰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수단과 견해의 차로 흑인들의 민권운동단체도 갈라져있다.

온건파로는 최초의 흑인해방단체인 NAACP와 SCLC가 대표적이다. NAACP는 1905년에 설립된 개량주의적인 합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SCLC는 「킹」목사가 영도한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받드는 단체로 전후일관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휘트니·영」이 이끄는 「전국도시연맹」도 온건파다. 과격파로는 SNCC를 비롯 「인종평등회의」 「흑인회교주단」 「아프리카·아메리카봉일조직」 등이다.

SNCC가 과격해진 것은 1966년 5월 당시 위원장이던 「로이·루이스」가 「온건파」라는 이유로 해임되고 「하바드」대학 출신의 「카마이클」이 위원장에 선출될때 부터이다.

이때 강경파들은 「정부의 흑백통합정책에 반대하고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발언권을 획득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미시시피」주에서 데모행진이 일어났을 때 위원장 「카마

이클」은 「블랙파워」를 슬로진으로 내 걸었다.

흑인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흑인 독자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획득, 그들의 일을 그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카마이클」은 「블랙파워는 폭력도 긍정한다」고 언명, SNOO와 공동보조를 취한 「인종평등회의」위원장 「미키시키키」도 「비폭력투쟁의 시기가 끝났다」고 호응했다.

「블랙파워」가 온건파에 의해 폭력긍정주의가 비난받은 것은 당연한 일로 의견이 대립되어왔다. 지난 1968년 3월 30일의 「블랙파워」대회는 「미국에서 분립, 새로운 「송하이」 독립국을 만들자」는 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이르렀다. 1966년 8월 「뉴스위크」지 조사에 의하면 흑인 인구의 88%가 비폭력과 합법투쟁을 부르짖는 「킹」목사의 온건노선을 지지했으나 그 후 점점 과격파로 쏠리게 되었다.

「킹」목사의 암살은 폭력화, 전투파해가는 흑인운동을 견제하던 랑파제를 무너뜨린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70년대에 있었어도 흑인운동은 점점 과격화하여 갈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폭력화해가는 흑백인문제는 월남선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사회를 내부로 부터 좀먹는 고질병균이 표면화, 미국사상 중대한 위기로 몰고가는 느낌이 짙어지는 것이다.

N . 한국의 대비책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미국의 여론주세는 첫째 미국이 세계속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나 둘째서인 개입은 국제정치의 추세나 국제정치의 모랄이라는 면에서 회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비미국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쉽사리 외국의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없을 것이나 여론은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갖는 영향력을 약간 줄인다 하더라도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다 미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의 입장과 결부시켜 미국의 여론 추세를 보면 한마디로 점점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리라 생각된다.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는 세계에 산재하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최소한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난 번 캄보디아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개입의 방향으로 진전시킨 예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얼마 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1개사단 쯤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보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더구나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일반 대중이나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미군의 철수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위 비틀기파의 입장을 고수하던 젊은 지식층이 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정부가 경제단체 내지 사회단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미국내의 여론이나 정책에 있어서 미군의 철수라는 명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젊었을 때 주장하던 바와 같이 강력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지는 않겠으나 현재의 중견층과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낼것 같다. 즉 현재 젊은 지식층인 학생집단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들이 중견세대로 등장할 때 그 강도나 열은 많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행동유형에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전쟁이 수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북괴동향이나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태는 한국의 안전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언제 제 2의 6.25 전쟁과 같은 사태가 발발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제 1차 경제 5개년 계획의 실시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현역 군인의 훈련이나 장비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근태에는 예비군의 창설로 여하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군의 원조가 없이 한국군 자체의 병력과 장비만으로는 한국의 안보문제를 보장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70년대 여론추세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 같으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유지비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단시간내의 이동가능성 즉 기동성의 증대는 이

러한 미국여론의 추세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군사력의 증강을 피해야 할 것이나 당면한 경제발전의 과제라든가 자원의 부족은 군사비의 확대를 곤란케 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장비는 제 2차 세계대전 시에 사용하던 것이 많은 데 이것을 새로운 무기로 현대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군 장비 현대화의 실현을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획득하는데 일층 더 노력하거나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국군의 증강을 피할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을지는 모른다。 따라서 미국과의 지속적인 안보협약 등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유대관계의 유지에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 등 국력의 증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력의 증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발전계획의 주요목표로서 수출의 확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것은 더구나 우리나라가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국제수지의 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있어서 외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데에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태도가 쉽게 변하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미국의 섬유

산업계에서는 국내섬유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경제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상·하원의 의원들도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처에 찬성하는듯 하다. 따라서 머지 않아 수입제한조치가 결정되지 않을가 예기되는데 만일 이러한 정책이 결정된다면 한국의 수출은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비중을 우리나라 전수출량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중에서 섬유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큰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섬유류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질때 우리나라 수출목표는 달성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계나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섬유류의 수입제한조처에 대한 여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국정부의 설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출상품의 시장에 몇가지 전략상품만을 수출할 것이 아니라 값이싼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수출에 수출정책의 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출상품이 다양화되면 갑자기 미국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국수출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내의 시장이 부유하면서도 소비를 많이 하는 거대한 시장이라서 미국을 해외시장의 확보나 개척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안정과 확대를 위해서는 일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을 여러나라에 다변화하므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이외의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기업가나 군부의 지도자는 전쟁을 요구한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도 예외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1970년대에 월남전이 종식된다고 가정하면 세계의 어느 지역에선가 또 하나의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제 1 전쟁터가 옮겨진다고 가정하면 한국도 역시 위험한 국가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는 더욱 크게 「클로즈 업」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방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여야 할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수개강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중소국의 지위를 「국제충간지대」라 한다. 이러한 중소국이 취할 수 있는 대외정책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들 수개의 강국간의 세력균형을 잘 이용해서 자유독립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둘째로는 이들 강국중의 하나나 둘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고 그 보호 밑에서 살려는 정책이다.

셋째로는 이들 모든 강국의 담보하에서 영세중립의 지위를 유지

하려는 정책이다. 엄격히 말해서 이들 세가지 정책의 하나를 채택하는 외에는 아무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신간지대국인 한국에게 남겨진 대외국시는 결국 첫째의 정책 즉 한국의 자주독립의 국시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민족으로서 본래 재봉해야 할 당연하고도 올바른 정책이다. 그런데 한민족이 국가적 자주 독립의 정책을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약간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요건을 한민족이 「근대민족주의」의 원칙을 수행하여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근대민족주의란 이경우 하나의 민족공동체가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자유, 독립, 통일된 근대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국제정치상의 원리원칙과 다름 없다. 이렇게 근본적인 분개인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상에서 있어서의 위대한 사명감을 자각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이 자주독립의 대외국시를 실시하는데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통일을 완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대외면만이 아니라 그 내정면에서도 근대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도 근대 민족주의의 불가결한 일면이며 근대적 민족주의는 원리적으로 「근대민족주의」와 뗄 수 없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민족이 자유, 독립, 통일의 대외국시를 실행하는 데는 아직 한 가지 요건이 남아 있다. 그것은 즉 경제, 기술, 건설의 요건이다. 이 세 전세제는 핵에너지혁명을 의한 제 2의 산업혁명의 전야에 서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세계의 각국은 모두 이 공전의 혁명시기를 통과할 것이다.

제 1의 산업혁명에서의 후진국은 제 2의 산업혁명에서는 선진자본주의국과 선진공산주의국을 따라 앞서서 공업기술혁명의 앞장을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은 영구히 후진 열세의 나라가 되는 운명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영고성쇠는 순환하는 것이 세계사의 법칙이다. 앞으로 온 제 2의 산업혁명에서는 저개발국의 대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은 반드시 선진국을 능가해서 세계의 선두에 서서 가야 할 것이다.